

광주 아파트 경비원 25% 부당대우 경험

300세대 소규모 아파트서 입주민 부당지시 많아 경비노동자 10명 중 8명 간접고용...고용 불안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 등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시한 '광주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0명 가운데 78명(25.7%)이 입주민과 관리자 등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당 대우 경험'은 한달평균 2.5회 가량이며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

파트에서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이 아닌 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간접고용 형태가 많았다.

300명 중 153명(51%)은 경비용역 회사, 92명(30.7%)은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경비노동자는 53명(17.7%)에 불과했다.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나 위탁관리회사가 바뀔 때 대체로

고용 승계가 된다고 응답한 경비노동자는 178명(58.5%)이었으며 61명(20.1%)은 전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67세지만 대부분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시간 맞고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취침 포함 6.5시간이었다.

휴게시간 활용 실태는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쉬 수 있다'가 40명(13.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휴게 공간 유무'에 대한 질

문에는 58명(19.1%)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40명(78.9%)은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파트경비노동자 근무 평균은 5.6년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아파트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 주업무는 방범활동 보다는 입주민 응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택배 관리 등 잡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지난해 177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대부분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열악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조인호 기자

'집배원노조 파업' 오늘 최종 협상

우정사업본부 집배 노동자들이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우편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우정노동조합은 8일 총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정노조가 지난달 24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2.87%가 총파업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참석률이 94.38%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파업을 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파업으로 결론날 경우, 우정사업본부 사상 처음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에는 집배원 25%,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우편집중국 직원은 65%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우편물부터 택배까지 다양 집배 상품을 다루는 우정사업본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물류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체국은 필수공익사업장이

다. 집배업무의 74.9%, 우편물을 분류하는 발착업무의 36.2%, 접수업무의 25.4%가 필수수직업무다.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는 위탁 택배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파업과 무관하지만, 우편물 분류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집배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고려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실질적인 업무량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에 달한다. 노동 일수로 환산하면 한국 평균 임금 노동자보다 8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123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 동안 숨진 집배원은 166명에 달했으며, 산업재해율은 1.62%로 전체공무원(0.49%)은 물론, 소방관(1.08%)보다도 높았다.

뉴시스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 사고 절반이 '음주 탕'

안전수칙 준수 당부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 사고의 절반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7~8월중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4건 중 물놀이 사고는 8건(33.3%)이다.

심장돌연사(10건·41.7%) 다음으로 많다. 추락사3건(12.5%), 자연재해 1건(4.2%)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더니 2016년(0건)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1건이 발생하고 지난해에는 3건으로 늘었다.

익사 사고의 원인으로는 8건중 4건(50%)이 '음주 후 물놀이'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는데,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양해승 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안전사고 취약시간대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위 날리는 해변질주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상 소서(小暑)인 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곡지해수욕장에서 한국마사회 랫트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 주최로 이색 불거리인 '제주마 해변경주'가 펼쳐지고 있다.

전두환씨 오늘 형사재판에 5·18 헬기 사격 목격 시민 4명 출석

5월13일·6월10일에 이어 세번째 증인신문 진행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석에 앉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한다.

지난달 10일과 5월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6명과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 39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은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드러냈지만,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목소리만 큼은 일치했다.

그동안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목격 시간대는 1980년 5월21일 오후, 장소는 (옛) 전남도청 상공·광주전변·광주 기독교병원 인근 상공으로 압축된다.

이번 재판에서도 앞서와 유사한 내용의 목격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최남규 기자

이런판결 저런판결

**3년 동안 10차례 성폭행·강도
행각 50대, 2심도 징역 20년**

“국민에 불안감...사회에 미치는 폐해 커”

3년 동안 대학가 주변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가 하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03년 7월9일 오전 4시 30분 광주 한 지역 당시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 흥기로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10차례(1차례는 주거침입 강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3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침입,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흥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도·성폭력 범행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고려센터 1577-1000]